

이탈표 사태 후 숨죽이는 ‘샤이 비명계’ 주목

찬성표와 다른 중간지대 관측
이 대표, 적극 소통 나설 듯
원내대표 선거 반기 들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발생한 ‘무더기 이탈표’ 사태로 불거진 민주당 내홍 사태 이후 당내 ‘샤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단일 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지도부를 당혹하게 한 표결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의총 등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던 샤이 비명계가 움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가서는 격전지인 수도권 등에서 내년 공천에 패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가진 이들 샤이 비명계가 무효 또는 가권표로 ‘경고 메시지’를 표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 안팎에서도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적극적 반명(반이재명)’과 가권·무

효표를 던진 ‘샤이 비명’으로 갈라져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명 인사로 분류되는 이상민·조승천 의원은 내홍 사태로 친명계의 비판이 커진 이후에도 방송에 나와 이 대표 거취 표명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샤이 비명계는 대체로 물밑에서 숨죽이는 양상이다. 강성 지지층의 이탈표 색출 작업 결과, 결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의미의 ‘수박’ 명단에 오른 샤이 비명계 중 상당수는 오히려 자신이 부결표를 던졌다고 인정까지 하는 상황이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이탈표’를 던진 이들은 뭉쳐 있는 집단이 아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며 “무표·기권표는 찬성표와는 또 다른 중간지대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들은 표결 후 당원들의 반발에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이들을 지렛대 삼아 이 대표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명’과는 결이 다른 ‘샤이 비명’ 인사들이 이 대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포용하느냐에 따라 비명계 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샤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명계의

원들 소통에도 더 적극성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인사를 주요 당직에 기용하는 ‘탕평책’ 등도 당 안팎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경우 샤이 비명계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그 계기로는 당장 다음 달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가 거론된다.

샤이 비명계가 물밑에서 뭉쳐 구심점이 될만한 원내대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친명계 중심의 현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계파색이 얹은 한 수도권 의원은 “우선 당 지지율 추이와 한두 달간의 흐름을 보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념촬영하는 김기현 후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발언하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민주 광주시당, 개혁안 제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최종 개선안으로 확정했다.

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 최고 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를 열고, 정치개혁특위가 최종안으로 제출한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원안 가결했다.

시당 정책특위는 수차례 공론화를 통해 광주를 하나의 단일 권역으로 하는 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조정의석과 석패율제를 가미한 방안과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비례의석 확대 등 2가지 안으로 압축한 뒤 추가 논의를 통해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시당은 영·호남, 충청권, 강원 등 전국적으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을 상대로 정치개혁을 촉구한 계획이다.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권역별로 5~8명을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식 선거제도로, 스웨덴은 전체 349명의 국회의원을 권역별 지역구 310명과 조정의석 39명, 덴마크는 175석 중 135석은 권역별, 나머지 40석은 조정의석으로 채우고 있다. 국내에 적용하면, 소선거구제 253석은 대선거구제로 전환해 17개 시·도를 하나의 대선거구로 전환하고, 47석의 비례 의석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의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시당은 부득이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엔 ‘권역별 완전 연동형’을 도입해 권역별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보장할 것으로 제안했다. 예컨대 의석수 25개인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이 30%를 득표하면 7~8석을 배정받고, 광주전남에서 국민의힘이 15%를 득표하면 전체 18석 중 3석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김용현 기자

국힘 전대 키워드 ‘윤심’...정책·비전 실종

영향력 막대 회비 엇갈려
당무 개입 논란도 자초

오는 8일 결승점을 앞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의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집권 여당이 돼 치르는 첫 전당대회인 만큼 전대 과정 전반에서 윤 대통령이 적지 않게 등장했다.

일단 당권 주자가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 순) 등 4명의 후보로 완성되기까지 ‘윤심’은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친윤’을 자처하던 나경원 전 의원은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던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나 전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를 계기로 당내 친윤 그룹·대통령실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결국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이력을 거론하며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를 내세웠다가,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제지를 받았다.

친이준석계 지지를 받는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 퇴출’을 구호로 내세우며 주류 세력과 각을 세우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반면, 전대 레이스 초기부터 친윤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김기현 후보는 ‘윤심 마케팅’으로 독특한 효과를 봤다.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 관계를 ‘밀당하는(밀고 당기는) 부부 사이’로 규정한 그는 당정 일체를 이루는 당 대표론을 내세우며 레이스 초반 미약했던 지지율을 선두까지 끌어올렸다.

‘윤심 전대’라는 말까지 나온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당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여당으로서 정책 비전 제시는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권 주자들이 윤심에 지나치게 기대거나 그 반대편에서 존재

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에 치중하면서 집권 여당 대표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무게감을 스스로 떨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지 말라’면서도 시시때때로 언론에 등장한 ‘대통령실 관계자발’ 메시지가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을 자초하면서 이번 전대가 ‘윤석열 전대’로 인식된 측면도 있다.

당권 주자들 입장은 엇갈린다.

김 후보 측은 “집권 초 여당 대표 선거에서 당연히 대통령실과 동기화되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노선, 소통 능력이 당 대표 자질의 중요 포인트”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안 후보는 정책 발표회를 세 번 했지만, 기득권과 공권력이 특정 후보를 ‘간택’해서 혼연일체가 돼 치르는 선거였다”며 “의원들도 내년 총선 공천 때문에 다른 정치적 신념과 양심적인 목소리를 단 한 명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산불 예방 총력” 특별대책기간 지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 우기 전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급증하는 상황을 보고받고 “행안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는 소살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림청 외에도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에서 가용 헬기, 장비, 인력 등을 총동원해 조기 진압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치를 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